2026. 1. 16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사 서명날인권 확보,

입법 성공 경험으로 남우기가 해내겠습니다!!



기호 3 남우기

출마의 변(變)

"기술사의 자존심, 국민의 안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동료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제27대 회장 후보자 남우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사'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술사는 국가 자격 체계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 위상은 모호하고,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사 서명날인권'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기술사가 설계도서와 기술서류에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적 책임의 상징입니다. 법적 허점 속에 방치된 기술사의 지위를 바로잡아 기술사의 책임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2. 검증된 '입법 성공 경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약속하지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구호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를 발로 뛰며 정보통신 분야의 법령 개정과 제도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안에 녹여내고,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적인 입법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사법」의 개정과 (가칭)「건축기술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직선제' 도입으로 소수의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겠습니다

다수를 빙자해 변화를 거부하며 회를 좌지우지 하는 소수의 낡은 기득권은 우리 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93% 회원이 염원하는 회장 직선제를 제 직(職)을 걸고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돌려주어, 소외된 종목 없이 6만 기술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4.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리더, 기술사 시대를 열겠습니다

AI와 스마트 기술이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사가 AI 정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 84개 전 종목이 소외됨 없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종목 간의 순번 정하기나 자리 이어받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 남우기, 직(職)을 걸고 약속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을 바라보며 기술사의 자존심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기술사 뱃지를 모두의 가슴에 달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에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16.

제27대 회장 후보자 남우기 올림

- 목 차 -

[제27대 회장 후보 남우기의 4대 핵심 공약]

제1공약 [위상] 국민안전의 수호자, "대한민국 기술사" 브랜드화

공약 1.1 기술사, 국민안전의 수호자 ····· 11
공약 1.2 한국기술사회 주관 안전기술박람회 개최 ····· 13

제2공약 [권익] 전임자들이 넘지 못한 '서명날인권' 완결 및 '건축기술법' 제정

공약 2.1 국회와 기술사를 잇는 상설협의 체계 ····· 16
공약 2.2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 18
공약 2.3 건축기술법 제정 ····· 20
공약 2.4 기술사 종목 정비 및 활성화 ····· 22
공약 2.5 업역 중재위원회의 설치 ····· 24
공약 2.6 기술사 국제교류 활성화 ····· 26
공약 2.7 기술사 활용 강화 및 보상 확대 ····· 28
공약 2.8 KDI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사 의무 참여 ····· 30

제3공약 [재정] 60억 부채 조기상환 및 '재정자립' 프로젝트

공약 3.1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 32
공약 3.2 경력관리와 연계한 기술사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 34
공약 3.3 회원 참여 사업 플랫폼 제공 ····· 36
공약 3.4 기술사사무소 사업 활성화 지원 ····· 38
공약 3.5 대한기술사회 통합 및 한국기술사협회로 명칭 변경, 브랜드 혁신 ····· 40
공약 3.6 건축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 42
공약 3.7 홍보 및 회원복지 강화 ····· 44
공약 3.8 전문분회 현안 해결 ····· 46

제4공약 **[혁신] 6만 회원이 주인인 "직선제 & AI 스마트 기술사회"**

공약 4.1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 49
공약 4.2 종목 분회장 모두가 참여하는 평의회 구성 ····· 51
공약 4.3 일하는 리더십, 30인 책임 부회장제 ····· 53
공약 4.4 100인 이사회로 확대 ····· 55
공약 4.5 본회와 지회간 협력체계 구축 ····· 57
공약 4.6 대의원 제도 활성화 ····· 59
공약 4.7 한림원 활성화 지원 ····· 61
공약 4.8 회원 민원처리 Help Desk 마련 ····· 63
공약 4.9 회와 회원간 소통 강화 ····· 65
공약 4.10 엔지니어링 AI연구소 설립 ····· 67
공약 4.11 종목별 맞춤형 AI서비스 보급 ····· 69
공약 4.12 기술사 전용 AI 스마트오피스 환경 제공 ····· 71
공약 4.13 기술사 생성형 AI 활용 경진 대회 개최 ····· 73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 남우기의 4대 핵심 공약

> “
>
> **기술사 서명날인 및 기술독립, 60억 부채조기상환, 회장직선제, AI 기술사회, 남우기가 반드시 해냅니다!”**

제1공약 위상 확보

국민안전의 수호자, "대한민국 기술사" 브랜드화

"국민의 생명을 설계하는 전문가, 이름에 걸맞은 예우를 쟁취하겠습니다.“

기술사의 본질적 역할 강화

기술사는 단순히 설계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한 다리를 국민이 건너고, 우리가 안전을 진단한 건물에서 국민이 잠듭니다. 기술사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이행 과제

- **"국민안전의 수호자" 기술사 브랜드화:** 국가 주요 안전 점검 및 재난 조사 시 해당 분야 기술사의 참여와 최종 서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안전 전문가 = 기술사' 공식을 확립하겠습니다.
- **기술사법의 거버넌스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추진:** 기술사 위상을 변호사·회계사급으로 격상하기 위해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기술사회 주관 KINTES 안전기술박람회 개최:** 현장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기술사가 가진 역량을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가치 증명해 가겠습니다.
- **국회내 대한민국 기술사 포럼 상설화:** 국회내 정부와 기술전문가인 기술사가 참여하는 기술사 포럼을 상례화 하여 현장의 각종 문제를 즉각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제2공약 권익 향상

전임자들이 넘지 못한 "서명날인권" 완결 및 "건축기술법" 제정

"구호가 아닌 실전 입법 전략으로 기술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법으로 지키는 기술 주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회장이 서명날인권을 약속했지만, 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명날인권은 전문가의 책임과 비례하는 권한입니다. 또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건축사**의 '관계전문기술자' 하청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고 기술사의 독립적 설계 및 감리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핵심 이행 과제

- **대관조직 신설 등 국회와 기술사회간 상설협의체 구성:** 기술사의 법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은 상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국회 업무를 관장할 전문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법제화:** 관계법령에 우선하는 「기술사법」의 권위를 세워,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도서에 기술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될 수 없도록 개별 사업법(건축법 등)을 동시에 개정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기술관리법」등 전문분야 업역 법제화:** 건축기계설비분회 등 각 전문분야의 업역 확보를 위한 노력에 본회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약 재정 확대

60억 부채 조기상환 및 "재정자립" 프로젝트

"회원 확대와 사업으로 수익을 늘려 빚을 갚겠습니다."

기술사회의 경제적 주권 회복

- 회관 구입으로 인한 부채(잔여 60억 원)는 회 운영의 큰 짐입니다. 회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회가 주도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회원 유입 확대를 통해 조기에 부채를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핵심 이행 과제

-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가동**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등록 전 의무 교육'을 법제화하고, 합격 후 1달 이내 집중 CPD 교육을 실시하여 신입기술사 회원 가입률 70% 달성
- **기술사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기업과 기술사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리쿠르팅 플랫폼을 운영하여 매칭 수수료 등 신규 수익 창출 및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 **기술사사무소협동조합 추진 및 회원 참여형 사업 플랫폼**
  NCS 개발, 기술 인증 사업, 특허 사업화 등 회원과 회가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가동하고 기술사사무소는 협동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수수료로 기여하도록 함.
- **대한기술사회와 통합 후 명칭변경**
  회에서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술사 조직의 활성화 추진

제4공약 혁신과 미래

6만 기술사가 주인인 "직선제 & 스마트 기술사회"

"다수를 빙자한 소수 카르텔을 깨는 직선제 개혁, AI기술을 주도하는 기술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참여가 곧 권력이 되는 거버넌스

- 특정 거대 종목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끝내겠습니다. 84개 전 종목이 소외됨 없이 참여하고, 최첨단 AI 기술로 회원들의 현장 실무를 돕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핵심 이행 과제

- **회장 직선제 즉시 도입:** 당선 100일 내 정관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모든 회원이 모바일로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는 '회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 **30인 책임 부회장 및 100인 이사회:** 분야별·부처별 리더십을 강화하여 지역과 전문 종목의 목소리가 회 운영에 반영되는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AI 연구소와 위원회, 전문교육 및 종목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84개 종목의 기술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설계 검토, 법령 검색, 보고서 생성을 돕는 기술사 전용 AI를 보급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AI활용 경진대회 개최:** 기술사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AI 실무 모델을 전 종목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준비된 입법 해결사 남우기는 다릅니다!"

전임 회장들이 넘지 못한 서명날인권의 장벽, 회의 목을 조르는 60억 원의 부채, 그리고 소외된 회원들의 목소리까지. 저 남우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한 그 실력과 끈기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만 기술사가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술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6. 01. 16.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후보 남우기 올림

공약

1

위상

국민안전의 수호자
“대한민국 기술사” 브랜드화

공약 1.1 기술사, 국민안전의 수호자

국민안전의 수호자 "대한민국 기술사" 대국민 인식 제고

당신의 일상이 안전한 이유 - 대한민국 기술사가 설계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필요성: "왜 기술사 브랜드 혁명인가?"

- **인지도와 가치의 불일치:** 기술사는 국가 주요 시스템(교량, 빌딩, 에너지, 정보망 등)을 설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가 안전 시스템의 허점:** 대형 재난 발생 시 근본적인 기술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의 공식적 참여와 책임 권한이 법적으로 미흡합니다.
- **위상 정립의 한계:**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사 관리 체계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 전문가 브랜드 구축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국가 안전 및 재난조사 기술사 참여 의무화

- **법적 제도화:**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 사고 조사 시, 해당 분야 기술사의 참여와 '기술적 검토서' 서명날인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겠습니다.
- **"안전 전문가 = 기술사" 공식 확립**: 정부 안전 정책 발표 시 해당 분야 기술사를 '국가 안전 자문관'으로 동석시켜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가 위상을 홍보하겠습니다.

나. 기술사법 거버넌스 격상 및 통합 관리

- **과기부 부총리 업무 승격:** 기술사법 관련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급 업무로 격상하여, 모든 부처의 기술 인력 활용 기준을 기술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 대국민 인식 개선 "Safety Guardian" 캠페인

- "우리 곁의 안전 파수꾼, 기술사"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 SNS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을 전개하여 기술사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직업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겠습니다.

라. 소요재원

- 예산:연간 약 4억 원 (브랜드 홍보 및 정책 연구비).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 수입금과 정부의 'AX 기반 국민안전 R&D' 예산을 확보하여 회원 부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존경받는 전문가, 안전한 대한민국"

- **기술사의 사회적 지위 격상:** 국민들이 기술사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기술사 자격의 가치가 의사·변호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되고 전문가적 자부심이 고취됩니다.
- **국가 안전망의 신뢰도 제고:**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직접 점검하고 조사하는 체계가 안착되어 부실 진단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체감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합니다.
- **정책 영향력 극대화:** 부총리급 거버넌스 확보를 통해 기술사들의 업역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법 개정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공약 1.2 한국기술사회 주관 안전기술박람회 개최

국민안전 지킴이 "한국기술사회 주관 안전기술 박람회 개최"

홍보와 수익을 동시에 잡는 솔루션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기술사회 주최 전시회인가?"

- **기술사의 사회적 가치 증명:** 현장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기술사가 가진 역량을 대중과 기업에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이 부재합니다.
-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닌, 기업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솔루션 매칭'을 통해 기술사사무소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협회의 재정 모델 다변화:** 전시 부스 운영 및 컨설팅 수수료를 통해 협회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킨텍스 협력 및 기술사 도슨트(Docent) 운영

- 킨텍스(KINTEX) 등 대형 전시 컨벤션과 협력하여 기술사가 직접 기업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가 가이드형 전시'를 기획합니다.
- 건설, 소방, 전기, 기계, 가스, 화공, 정보통신 등 관련 종목 기술사가 참여하는 융복합 전시관을 구성합니다.

나. K-PE 리쿠르팅 존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 **리쿠르팅 존:** 대형 건설사/엔지니어링사 인사담당자와 기술사 간의 1:1 매칭 상담회를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 **기술 세미나**: 글로벌 안전 스탠다드 및 최신 기술 동향 세미나를 주관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합니다.

다. 국민 안전 체험 및 홍보

- 일반 국민이 안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존'을 구성하여 기술사 자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라. 소요재원

- 행사 기획 및 운영:약 3억 원 (정부 보조금 및 기업 협찬 수익으로 자가 충당).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초기 기획 예산으로 활용하고, 부스 분양 및 티켓 수익으로 환수합니다.

3 기대효과: "홍보와 실리를 모두 잡는 기술사 축제"

- **기술사 위상 격상:**'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수익 창출 및 회원 혜택:** 전시회를 통한 직접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참여 기술사들에게 구직 및 기술 자문 계약 등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 **파트너십 강화:** 정부 부처와 공동 주관 또는 후원을 이끌어 내어 국가 안전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회의 입지를 굳힙니다.

공약

2

권익

전임자들이 넘지 못한 “서명날인권” 완결 및 “건축기술법” 제정

공약 2.1 국회와 기술사를 잇는 상설협의 체계

입법 추진력 강화
"국회와 기술사를 잇는 상설 협의 체계 구축"

기술사의 전문성을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상시적인 입법 소통 창구를 가동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국회 상설 협의 체계인가?"

- **정책 제안의 상시성 확보:** 기술사 관련 법안이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견고한 네트워크와 상설 협의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 주도의 입법 환경 조성:** 기술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술적 현실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헌법적 가치 실현:**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제6항)를 다하기 위해 국가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기술사 활용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국회 전담 조직 및 상설 포럼 운영

- **국회 대관 담당 신설:**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의원·보좌관·종목별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사 정책 상설 포럼'을 개설합니다.

나. 정책 전문위원회 설치 및 보고서 발간

- **전문가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PEA 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수립합니다.
- **정책 보고서 발간:** 산업기술 동향 전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입법자들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다. 기술사 활용 체계 법제화 추진

-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안전 및 기술 사업에 기술사 참여를 명문화하는 포괄적 법제화 로드맵을 가동합니다.

라. 소요재원

- 포럼 운영 및 보고서 발간: 연간 약 1억 원.예상
- 정책 연구비:약 5,000만 원.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및 정부 정책 연구 용역 수주를 통해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정책을 주도하는 강한 기술사회"

- **입법 영향력 극대화:** 상설 포럼과 전담 조직을 통해 기술사 관련 입법 추진 시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고 정책 관철 가능성을 높입니다.
- **기술사의 사회적 위상 확립:** 국가 정책의 핵심 자문 파트너로서 기술사의 위상이 격상되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 **실질적 업역 보호 및 창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기술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악법을 저지하고,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신규 업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공약 2.2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기술사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술사의 가치를 법으로 못 박고, 잃어버린 현장의 주권을 되찾겠습니다.

1 필요성: "왜 법·제도의 근본적 혁신인가?"

- **법적 위상의 한계:** 현재 기술사는 각 부처별로 파편화된 기준에 따라 활용되고 있어, 국가 최고 기술 전문가로서의 통합적 권위가 부족합니다.
- **업역 침탈과 등급의 모순:**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위 법령에 묶인 등급 체계로 인해 기술사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설계권 등 핵심 권한이 타 직역에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PQ 제도:** 과거의 기술사 가점이 축소·폐지되면서 실력 있는 기술사들이 공공 입찰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기술사 거버넌스 격상 및 설계권 확보

- **컨트롤타워 강화:**「기술사법」 관련 사무를 과기부 부총리급 업무로 격상하여, 모든 부처가 준수해야 할 '**기술사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합니다.
- **설계도서의 서명날인권 확보:** 「기술사법」개정을 통해 기술사의 기본 설계권을 명문화하고, 전문 기술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확보합니다.

나. 등급 및 PQ 제도 합리화

- **등급 분리:**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업별 기술자 등급 체계에서 기술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 최고 전문가의 배타적 업역'을 확보합니다.
- PQ 혁명: 공공 입찰(PQ) 시 기술사 가점제를 전면 부활시키고, 기술사 CPD 교육을 PQ 교육 점수로 인정받도록 제도화합니다.

다. 경력관리 일원화 및 안전 참여 의무화

- **경력관리 독점권:**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흩어져 있는 기술사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기술사회'로 일원화하여 관리 효율성과 데이터 공신력을 확보합니다.
- **안전 주권 확보:** 국가 대형 사고 조사 및 정부 안전 점검 활동 시 해당 분야 기술사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라. 국제 통용성 및 소요재원

- **MRA 확대:**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사 상호인정(MRA)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사 통용성을 강화합니다.
- **재원 조달:** 초기 입법 연구 및 공청회 비용(약 2억 원)은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활용합니다.

3 기대효과: "법이 지켜주는 기술사의 밥그릇"

- **기술사의 배타적 권한 확립:** 부총리급 업무 격상과 서명날인권 확보를 통해 타 직역의 업역 침범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사의 법적 영토를 확장합니다.
- **경제적 실익 극대화:** PQ 가점 부활과 등급 차별화를 통해 기술사 보유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곧 기술사의 몸값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 **공신력 있는 전문가 단체 도약:** 경력관리 일원화를 통해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6만 기술사의 생애 주기별 전문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체계를 완성합니다.

공약 2.3 건축기술법 제정

기술독립의 완성 「건축기술법」제정 추진

건축사의 하청 구조를 타파하고, 기술사의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건축기술법인가?"

- **건축 행정과 기술의 부적절한 혼재:** 현재 건축법은 행정적 인허가와 고도의 전문 기술 영역이 건축사 중심으로 묶여 있어, 실제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라는 이름의 하청 구조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 **불분명한 책임과 권한:** 기술사의 설계 및 감리 권한이 법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는 곧 국민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전문성 발휘의 장벽:** 해체감리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기술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제한되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업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건축 행정과 기술의 법적 분리 추진

- 건축법에서 엔지니어링 및 안전기술 영역을 분리하여 별도의 '건축기술법' 제정을 발의하고, 기술사를 건축사의 보조자가 아닌 대등한 **'건축 관계자'**로 격상시킵니다.

나. 범 기술사 연대 및 감리권 확보

- **분야별 협력:** 구조, 토질, 소방, 전기, 기계, 통신, 조경 등 전문 기술 분야와 건축 시공 분야 기술사가 공동 참여하는 '입법 추진 연대'를 구성합니다.
- **감리권 명문화:** 해체공사 감리 등 건축물 안전 관련 감리 업무를 기술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확보하고 서명날인 권한을 강화합니다.

*** 건축기계설비의 경우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기술법이 추진되면 이에 관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다. 분리 발주 및 책임 권한 명확화

- **공정한 계약:** 기술 용역의 분리 발주를 제도화하여 적정 대가를 보장받고, 각 전문 분야별 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라. 소요재원

- 입법 추진 및 공청회: 약 2억 원 추정
- 대국회 홍보 및 로비: 연간 약 1억 원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및 관련 전문 분회 공동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당당한 주역, 안전한 대한민국"

- **기술사의 기술 독립 실현:** 건축사의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기술사 자격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국민 안전 및 시공 품질 향상:** 전문가 주도의 독립적인 감리와 설계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대한민국 건축물의 안전 스탠다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 **실질적 업역 확대 및 수입 증대:** 분리 발주와 감리권 확보를 통해 기술사사무소 및 개인 기술사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됩니다.

공약 2.4 기술사 종목 정비 및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의 정비 및 활성화"

84개 종목의 전문성을 현대화하고, 유사 종목 간의 융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종목 정비가 필요한가?"

- **국제 기준과의 격차 해소:** 현재 국내 기술사 종목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어(84개 종목),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표준(MRA 등)과 연계하는 데 행정적·기술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융복합 기술 대응력 강화:** 현대의 기술 환경은 여러 분야가 융복합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나, 세분화된 종목 구조로는 복합적인 기술 민원과 업역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종목별 자생력 확보:** 소수 기술사만 존재하는 종목의 경우, 독자적인 정책 발언권과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유사 종목과의 전략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종목 체계 정비

- 글로벌 표준화: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및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기술사 종목 분류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체계로 재편합니다.
- APEC엔지니어링 국가: 기술사 종목 16개, 일본 21개 종목

나. 유사 종목 간 통합 및 업무 범위 확대

- **전략적 통합:** 기술 유사성이 높은 종목들을 묶어 대형화함으로써, 정책 제안 시 목소리를 높이고 융복합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다. 시범 정비 종목 발굴 및 시행안 마련

- **파일럿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정비 종목'으로 지정하고, 기존 기술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도 신규 진입자가 넓은 업역을 가질 수 있는 시행안을 마련합니다.

[소요재원]

- **연구 용역 및 공청회:** 약 1억 원 (종목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및 연구비).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추가 분담 없이 추진합니다.

3 기대효과: "더 넓은 업역, 더 강한 기술사"

- **기술사 자격의 위상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종목 정비를 통해 해외 진출 및 MRA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자격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시장 대응력 및 수주 경쟁력 강화:** 유사 종목 통합을 통해 기술사가 커버할 수 있는 법적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이는 곧 수주 기회의 확대와 기술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 **효율적인 조직 운영:** 84개로 흩어진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여 협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된 종목·분회들은 보다 강력한 정책 로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약 2.5 업역 중재위원회의 설치

업역 갈등의 합리적 해결, "업역 중재위원회의 설치"

종목 간 갈등을 상생의 기회로 전환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업역을 공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업역 중재위원회가 필요한가?"

- **종목 간 업역 분쟁 심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종목 간의 업무 범위가 겹치며 발생하는 갈등을 본회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절실합니다.
-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조정:**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존 기술의 쇠퇴에 따라 기술사들의 업무 영역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전체 기술사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판정 필요:** 특정 분야의 치우침 없이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분쟁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권위 있는 중재 기구의 구성

- 학계, 현장 실무 전문가, 법률가(변호사 등)를 포함하는 'KPEA 업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 마련

- 분쟁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직무 분석과 현장 실사가 포함된 표준 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결과에 대한 승복도를 높입니다.

다. 중재 내용의 제도화 및 법 개정 추진

- 위원회에서 도출된 최종 조정안을 기술사법 및 부처별 개별법령 개정에 즉각 반영하여 법적 권한으로 완성합니다.

라. 소요재원

- 위원회 운영 및 연구비:연간 약 7,000만 원.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활용하며, 중재 요청 종목 분회

간의 공동 분담 시스템을 병행합니다.

3 기대효과: "화합을 통한 강력한 결속"

- **내부 분쟁의 최소화:** 소모적인 종목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협회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인 협상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 **기술 주권의 체계적 수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선제적 업역 조정으로 타 직역에 의한 업역 침탈을 방지하고 기술사의 법적 영토를 견고히 지킵니다.
-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 정립:** 객관적인 중재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적 자정 능력'을 갖춘 품격 있는 전문가 단체로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공약 2.6 기술사 국제교류 활성화

글로벌 도약의 파트너, "기술사 국제교류 활성화"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을 세계로, 글로벌 기술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기술사 국제교류인가?"

- **해외 시장 진출 필수성:**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 기술사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시급합니다.
-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선진 기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습득하고, 한국 기술사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위상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 **K-기술의 브랜드화:** 한국형 ICT 및 엔지니어링 교육 모델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기술사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강화:

- 국가별 기술 기준 및 수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해외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글로벌 PE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나. 한일기술사대회 및 종목별 교류 내실화:

- 기존 한일 기술사 대회를 단순 친목을 넘어 실무 기술 세미나와 비즈니스 매칭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목별 특성에 맞는 국가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다. 해외 K-ICT 및 엔지니어링 교육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한국의 기술사 제도와 ICT 기술 교육을 수출하고, 현지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활용합니다.

라. 소요재원

- 국제 행사 및 교육 운영: 연간 약 8,000만 원.
- 재원 조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금 및 ODA 예산을 적극 수주하여 협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일부 투입합니다.

3 기대효과: "세계를 향한 무한한 업역"

- **해외 수주 기회 확대:**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사무소의 해외 프로젝트 직접 수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MRA(상호인정) 국가 확대를 위한 민간 차원의 기술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국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국위 선양 및 브랜드 가치 상승:** 'K-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부심과 품격을 고취합니다.

공약 2.7 기술사 활용 강화 및 보상 확대

국가적 위상 제고,
"기술사 활용 강화 및 보상 확대"

국가 주요 정책의 주역으로, 기술사의 가치를 보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기술사 활용 강화와 보상이 필요한가?"

- **실질적 기술 인력 검증 부족:** 정부사업 수주 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단계에서 자격 대여 등을 방지하고,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사가 현장에 투입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가 미흡합니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 소외:**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 최고 기술 전문가인 기술사의 공식적인 참여 창구가 부족합니다.
- **낮은 사회적 예우와 인식:**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사의 공로에 비해 정부 차원의 포상과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기술사 자격의 자부심과 사회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정부사업 기술사 검증 의무화 및 정책 참여 확대

- **PQ 확인 의무화:**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사업의 PQ 심사 시 해당 기술인의 '기술사 등록증' 확인을 법적 의무화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 **예타 위원 참여:**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기술사 위원의 참여 및 추천권을 본회에 부여하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법제화합니다.

나. 정부 포상 확대 및 선정 공정성 확보

- 훈·포장 격상: '기술사의 날' 등 주요 행사 시 정부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투명 포상 추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 대국민 홍보 채널 강화 및 위원회 설치

- 언론 홍보위원회: 언론 전문가와 기술사로 구성된 상설 '언론 홍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술 이슈 발생 시 기술사가 직접 대국민 브리핑 및 해설을 수행하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라. 소요재원

- 위원회 및 홍보 운영비: 연간 약 6,000만 원.
- 재원 조달: 회원사업 수익금 및 정부 정책 홍보 위탁 사업비를 활용합니다.

3 기대효과: "신뢰받는 전문가, 존중받는 대우"

- **부적격 기술자 퇴출 및 일자리 보호:** 등록증 확인 의무화를 통해 자격 대여를 근절하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기술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권한과 수주 기회를 보호합니다.
- **국가 정책의 기술적 공신력 제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기술사가 참여함으로써 국책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견인합니다.
- **기술사 브랜드 가치 및 자긍심 고취:** 정기적인 언론 노출과 정부 포상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술사는 국가 최고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회원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공약 2.8 KDI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사 의무 참여

KDI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사 참여 의무화

대한민국 SOC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는 현장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1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KDI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재무성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술적 타당성과 실제 현장 구현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부족함.
- 부적절한 기술 검토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및 공기 연장 등 국가 예산 낭비 사례 빈번.

2 핵심 공약

- **기술적 타당성 검증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내 '기술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해당 분야 **기술사 참여 및 검토 의견서 제출 의무화.**
- **예산 산정의 정확성 확보:**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사의 설계 내역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공사비·사업비 산정 유도 및 예산 낭비 방지.
- **기술사 추천제 도입:** 한국기술사회를 통한 공정한 기술사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3 기대효과

-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공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비 산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 **기술사 위상 격상:**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전문가로서 기술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 **프로젝트 품질 및 안전 제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잠재적 기술 리스크 사전 차단.

공약

3

재정

60억 부채 조기상환 및 “재정 자립” 프로젝트

공약 3.1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기술사 합격 자부심을 회의 강력한 재정 동력으로 전환

1 필요성: "왜 신입 기술사 교육인가?"

- **정체성의 골든타임:** 기술사 합격 직후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협회가 전문가 윤리와 사회적 역할을 가이드(On-boarding)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기회를 상실합니다.
- **가입률의 획기적 개선:** 현재 신입 기술사의 협회 가입률은 약 2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직의 노쇠화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법적 지위 강화:**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안전 및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법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기술사법 개정 통한 교육 의무화

- 신입 기술사 등록 전 '안전 및 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나. 합격 후 1달 이내 '집중 CPD 교육' 실시

- 정보통신분회의 성공 모델(7년간 합격자 161명 중 95% 본회 가입 달성)을 전 종목으로 확대
- 합격 발표 즉시 축전 발송 및 회원 가입과 연계된 CPD 교육 안내

다. 직선제와 연계한 회원 가입 독려

- 직선제 실시를 통해 '내 손으로 회장을 뽑는 협회'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가입 유도 (건설기술인협회 6년 만에 190% 성장 사례 벤치마킹).

라. 소요재원

- 교육장 임차 및 운영비: 연간 약 0.9억 원 예상.
- 재원 조달: 신규 유입 회원(연간 1,000명 이상 목표)의 입회비 및 연회비 수입(연간 11억 원 이상)으로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자가 충당

3 기대효과: "숫자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 **가입률 70% 이상 달성:** 현행 26%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가입률을 즉각 끌어올려 협회의 대표성 확보.
- **재정 위기 완전 해결:** 매년 발생하는 약 11억 원 이상의 추가 가용 재원의 일부를 회관 부채(60억 원) 상환에 투입하여 부채 조기 상환 달성
- **강력한 조직력 확보:** 젊고 열정적인 신입 기술사들이 주역이 되는 역동적인 기술사회로 탈바꿈하여 대정부 협상 및 입법 투쟁의 동력 확보.

공약 3.2 경력관리와 연계한 기술사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기술사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기술사회 플랫폼에 있는 인재는 믿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기술사 전용 매칭 플랫폼인가?"

- **신뢰 기반 채용 채널 부재:** 기업이 우수한 기술사를 찾고 싶어도 검증된 경력과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창구가 부족합니다.
- **불투명한 처우와 저평가:** 기술사의 고도화된 전문 지식에 비해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및 처우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협회의 실질적 회원 서비스 강화:** 회비 납부에 대한 대가를 '일거리 창출'과 '처우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혜택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온라인 리쿠르팅 플랫폼 및 표준 DB 구축

- **통합 DB:** 기술사의 전문 경력, 프로젝트 수행 이력, 희망 연봉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하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리쿠르팅 포털:** 기업과 기술사가 직접 소통하고 매칭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개설합니다.

나.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및 대외 협력

- **전략적 연대:** 엔지니어링협회, 대형 건설사, 주요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플랫폼 내 '기업 전용 홍보관'을 유치하고 우수 기술사 우선 채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다. 자립형 수익 모델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수익 창출:** 매칭 수수료 및 기업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여 협회의 새로운 자생적 수익원을 확보합니다.
- **가치 표준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사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회원들의 연봉 협상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합니다.

라. 소요재원

-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약 1억 2,000만 원 (일회성 개발비).
- 운영비:연간 약 4,000만 원 (서버 및 운영 인력).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및 초기 기업 광고 협찬금으로 충당.

3 기대효과: "검증된 인재, 정당한 대우"

- **기술사 브랜드 가치 극대화:** "협회가 보증하는 인재"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켜 기술사 자격의 위상을 변호사·회계사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 **회원의 경제적 이익 실현:** 협회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속 기업 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더 나은 처우를 보장받는 이직 기회를 확대합니다.
- **협회의 재정 건전성 및 조직력 강화:** 매칭 수익을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협회가 내 밥그릇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통해 자발적인 회원 가입과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공약 3.3 회원 참여 사업 플랫폼 제공

실리와 성장을 잇는 "회원참여형 개방형 사업 플랫폼 제공"

기술사의 전문성이 곧 사업이 되는 '공유 경제형 기술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개방형 사업 플랫폼인가?"

- **개별 전문성의 조직화 필요:** 개별 기술사나 소규모 사무소의 우수한 전문 역량이 분산되어 있어, 대형 정부 용역이나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에 한계가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창출:** 단순 회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회원과 회가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협력체'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분회 및 조직 활성화:** 각 종목 분회와 원로 그룹(한림원)의 지식 자산을 사업화하여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개방형 비즈니스 허브 구축

- 기술사 회원, 사무소, 분회, 본회 조직이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나. 정부 및 민간 용역 사업 확대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학습모듈 개발 등 정부 위탁 용역 참여를 본회 차원에서 대폭 확대하고 회원들에게 과업을 배분합니다.
- **기술 인증 사업:**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KPEA 기술 인증제'를 개발하고, 해당 분회가 인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 기술 자원 공유 및 성과 배분 모델

- **기술 공유:** 특허 등 기술 자원의 공유·교환·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 아이템 제공자'와 '과업 수행자'로 역할을 나누어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정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연구소 연계:** 한림원 산하 기술연구소의 원로 기술사 자문과 플랫폼 참여 회원들의 실무 역량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라. 소요재원

- 플랫폼 구축 및 운영:약 1억 5,000만 원 (통합 전산망 고도화 비용 포함).
- 재원 조달:사업 수익의 일부(수수료 등)를 회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초기 구축비는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에서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일하는 기술사, 부강한 기술사회"

- **회원의 직접 소득 증대:** 협회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 용역 및 인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사 개인 및 사무소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분회 및 지회 활성화:** 종목별 인증 사업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소외되었던 분회들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거듭나며 조직 응집력이 강화됩니다.
- **협회의 재정 자립 가속화:** 사업 수익의 일부를 회 발전에 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회비 인상 없이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과 회원 복지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공약 3.4 기술사사무소 사업 활성화 지원

자립과 도약을 돕는 "기술사사무소 사업 활성화 지원"

개업한 기술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사무소 활성화 지원인가?"

- **높은 창업 문턱과 고정비 부담:** 1인 기술사사무소 개설 시 임대료와 행정 인력 채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서 기술사사무소 창업이 저조합니다.
- **불합리한 입찰 구조:** 대형 엔지니어링사 위주의 입찰 관행으로 인해 실력 있는 소규모 기술사사무소들이 공공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대형 사업 참여 기회 제한:** SOC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기술사사무소가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공동 사무소 개설 및 행정 지원 센터 운영

- 기술사회관 및 지역 거점에 '공동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저렴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본회 차원에서 공통 행정 인력을 매칭하여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나. 공공입찰 '기술사사무소 우선 참여제' 추진

- 공공기관 발주 용역 중 일정 금액 이하(3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사무소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거나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다. SOC 사업 컨소시엄 의무화 및 기획 확대

- 대규모 SOC 사업 발주 시,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가점 요인으로 설정하거나 의무화하여 기술사들의 실무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라. 소요재원

- 공동 사무실 조성: 약 2억 원 (회관 리모델링 및 초기 집기비).
- 행정 지원 운영비: 연간 약 1억 원.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과 공동 사무소 이용 기술사들의

소정의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독립된 기술사의 경제적 자립"

-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창업 초기 비용 및 행정 부담 감소로 유능한 기술사의 창업 촉진은 기술 서비스 시장의 다양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 **실질적 일거리 확보:** 공공입찰 참여 보장 및 SOC 컨소시엄 확대를 통해 기술사사무소의 직접 수주 실적이 쌓이고 경제적 자생력이 강화됩니다.
- **기술 전문성 강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종속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기술 판단과 책임 설계가 가능해져 기술사 전체의 사회적 위상이 격상됩니다.

공약 3.5 대한기술사회 통합 및 한국기술사협회로 명칭 변경, 브랜드 혁신

대통합과 브랜드 혁신 "한국기술사협회로의 재탄생"

법적·사회적 직역 대표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6만 기술사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대통합과 명칭 변경인가?"

- **이원화된 조직의 비효율 제거:** 현재 한국기술사회와 대한기술사회로 나뉘어 있는 구조는 대외 협상 시 목소리를 분산시키고 기술사 권익 보호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정체성 재정립:** '회'라는 명칭은 대외적으로 친목이나 학계 이미지로 오인되기 쉬워, 강력한 권익 수호 단체인 '협회(Association)'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 **법적 강제력 확보:** 모든 자격자가 하나의 단체에 결속되어야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압도적인 입법 로비력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한국기술사회·대한기술사회의 대통합 추진

- **통합 로드맵:** 조건 없는 대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기술사회의 기존 업무 연속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회원 권리를 승계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나. 한국기술사협회(KPEA/KPEI)로의 명칭 변경

- **브랜드 혁신:** 명칭 변경을 통해 법적·사회적 직역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을 격상하고, 기술사의 공신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CI/BI를 도입합니다.

다. 기술사 '의무가입제' 입법 추진

-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자격 취득자의 협회 의무가입을 명문화하여, 자격증 관리는 물론 윤리 의식 고취와 업역 수호를 위한 재정적·인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라. 소요재원

- 행정 및 브랜드 개편: 약 1억 원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리뉴얼).
- 재원 조달: 통합에 따른 운영비 효율화 및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활용합니다.

3 기대효과: "강력한 단일 대오, 흔들리지 않는 위상"

- **유일 법정 단체의 정통성 확보:** 분열된 조직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공학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합니다.
- **대정부 협상력 극대화:** 6만 기술사 전체가 참여하는 '협회'의 위상을 바탕으로 건축사협회 등 타 직역과의 업역 다툼에서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선점합니다.
- **회원의 실질적 권익 보호:** 의무가입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회원들에게 더 강력한 법률 지원, 민원 해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공약 3.6 건축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건축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건축법에 근거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사의 실무 권한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건축공사감리 전문교육인가?"

- **법적 근거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 공사감리 수행 기관으로서 기술사와 현장 기술자들에게 고도화된 감리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교육 서비스의 포괄적 확대:** 기존 해체공사 감리 교육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건축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감리 전문교육'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사들의 전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 **시장 신뢰도 제고:** "기술사회가 인증한 감리 전문가는 다르다"는 시장의 인식을 확립하여 기술사의 감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공사감리 전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행

- **커리큘럼 구축:** 건축법 및 최신 안전 기준을 반영한 기술사 및 현장 기술자 대상 맞춤형 공사감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강사단 구성:** 각 종목별 최고의 실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들을 전문 강사로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극대화합니다.

나. 정부 인증 교육기관 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본회를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전문교육 법정 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아 공신력을 확보합니다.

다. 소요재원

-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비:약 8,000만 원.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약 4,000만 원.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초기 투자비로 활용하고, 교육 수강료 수익을 통해 자가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대효과: "전문가 주도의 안전한 건설 현장"

- 기술사의 실무 위상 강화:법정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기술사가 건축 공사감리의 핵심 주체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실무 권한을 강화합니다.
- 안전 사고 예방 및 품질 향상:고도화된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사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교육 사업 수익 창출:해체공사를 넘어 전체 공사감리로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협회의 교육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합니다.

공약 3.7 홍보 및 회원복지 강화

회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홍보 및 회원 복지의 획기적 강화"

"기술사가 대우받고, 회원이 행복한 기술사회"
- 실질적인 예우와 소통으로 응답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홍보와 복지의 강화인가?"

- **기술사 위상 홍보 부재:** 산업 현장의 기여도와 기술 동향을 대외적으로 알릴 전문 매체가 부족하여 기술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회원 간 네트워크 및 소속감 저하:** 파편화된 회원 활동을 유기적으로 잇고, 취미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협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 **봉사하는 리더에 대한 예우:** 대의원, 이사회 등 협회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의 전면 복원 및 혁신

- **기술사 신문 복간:** 산업 현장의 기술 동향과 회원 활동을 심층 보도하는 전문 신문을 복간하여 기술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기술사 합격수기 공모전, 분야별 기술 트렌드 브리핑 등 영상 콘텐츠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MZ세대 기술사 유입을 가속화 합니다.

나. 각종 회원 활동 및 동호회 지원 확대

- **스포츠 및 동호회:** 축구단(회장컵 대회 지원 및 외부 교류 확대), 골프회, 산악회 등 회원들의 자발적 동호회 구성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확대 배정합니다.

다. 공식 회의 참여 수당 지급

- 대의원 대회, 이사회 등 협회 운영을 위한 공식 회의 참석 시 실비 성격의 참여 수당 지급 체계를 마련합니다.

라. 소요재원

- 신문 복간 및 동호회 지원:연간 약 1억 2,000만 원.

- 회의 참여 수당: 연간 약 8,000만 원.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수익을 회원 복지 기금으로 우선 배정하여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사랑받는 리더, 자부심 넘치는 회원"

- **사회적 인식 개선:** 전문 매체(신문과 유튜브)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로 기술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 **공동체 의식 및 가입률 상승:** "협회가 나의 여가와 활동까지 챙겨준다"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회원 간 결속력이 단단해지고 비회원의 가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 **책임 있는 회무 참여 독려:** 참여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공식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합니다.

공약 3.8 전문분회 현안 해결

전문분회의 힘, 본회의 전략으로!
"종목별 업역 수호 및 제도 혁신"

전문분회 혼자서는 어렵지만, 본회와 남우기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1 필요성: "왜 본회와 분회의 연대가 시급한가?"

- **개별 대응의 한계:** 각 종목이 직면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은 부처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개별 분회의 행정력만으로는 국회와 정부의 문턱을 넘기 힘듭니다.
- **직역 간 침탈 방어:** 건축사 등 타 직역의 업역 침범에 맞서기 위해서는 84개 전 종목을 아우르는 본회 차원의 통합된 입법 로비와 법률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기술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AI 시대의 도래와 융복합 기술의 확산에 따라 기존 법체계의 전문 분류와 업무 범위를 기술자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분야별 8대 핵심 과제 해결 SWAT 팀 가동

- 식품: 기술사법 기술분류체계 내 '농림'에서 '식품'으로의 독립 분류 추진.
- 산림: 특급 기술인 개방 요구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및 기술 주권 수호.
- 지질·지반: 분회와 사단법인 간의 유기적 조직 통합 및 행정 지원.
- 조경:「조경진흥법」 제정 및 공공발주 용역의 조경 분리발주 명문화.
- 기계:「기계설비법」 상의 독자적 설계권 및 감리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 건설/산업기계: 유사 종목 간 전략적 통합을 통한 업무 대응력 및 시장 파워 강화.
- 정보관리:「정보통신공사업법」 내 기술사의 업역 확보
- 품질관리: AI 시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법적 요건 마련 및 기술사 참여 의무화.

나. 본회 직속 '입법 및 법률 지원 센터' 운영

- 각 분회장이 본회 '책임 부회장' 또는 '이사'로서 관련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본회는 입법 전문가와 변호사단을 투입하여 실무를 전담 보좌합니다.

다.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

- 운영 예산: 정책 연구 및 입법 추진비 연간 약 1억 원 편성.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로 확보되는 연간 11억 원 이상의 신규 수익 중 25%를 '분회 권익 보호 기금'으로 우선 배정하여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막혔던 현안이 풀리고, 기술사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 **실질적인 업역 확보 및 수입 증대:**분리발주, 설계·감리권 명문화 등을 통해 각 종목 기술사들의 실질적인 일거리가 창출되고 대가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강력한 조직 결속력:**"협회가 나의 업역을 위해 싸워준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소외되었던 전문분회 기술사들의 협회 참여와 정회원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 **국가 기술 체계의 선진화:**파편화된 기술 분류를 현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공약

4

혁신

6만 회원이 주인인
“직선제 & 스마트 기술사회”

공약 4.1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회원주권 강화, 직선제 개혁과 소통 혁명"

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회원 소통 대전환

1 필요성: "왜 지금 소통 혁명인가?"

- **정통성의 위기:** 간선제는 6만 회원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대외 협상력과 조직 응집력이 저하됨.
- **세대 단절의 가속화:** 회장 출마 조건(정회원 10년)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기술사들이 회 운영에서 소외되어 조직의 노쇠화 초래.
- **폐쇄적 의사결정:** 이사회 및 총회의 주요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회 운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직선제 추진본부' 발족 및 후보자 공동 선언 추진

- **직선제 확정:** 당선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직선제를 위한 정관 개정
- **후보자 합의:**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 직선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후보자 공동 선언을 제안하여 개혁의 진정성 확보.

나. 출마 조건 완화 (10년 → 5년)

- **장벽 제거:** 현행 정회원 경력 10년인 회장/임원 출마 자격을 5년으로 완화하여 4050 젊은 기술사들의 회 운영 참여 기반 조성.
- **세대 통합:** 원로의 경륜과 젊은 기술사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이사회 구성.

다. 100% 모바일 전자투표 및 회 운영 공개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투표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선거 비용 절감.
- 이사회, 대의원총회, 평의회 등 주요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

라. 소요재원

- 시스템 구축: 모바일 투표 시스템 및 화상 회의 중계 인프라 임대

- 운영 및 홍보: 직선제 공론화 및 유튜브 운영비 (연간 약 4,000만 원, 신규 회원 수익금 활용).

3 기대효과

- **강력한 대표성 확보:** 6만 기술사가 직접 뽑은 회장이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협상력 극대화.
- **조직의 젊음 회복:** 출마 조건 완화로 실력 있는 젊은 기술사들이 유입되어 협회가 미래 지향적 전문가 단체로 거듭남.
- **회원 참여 일상화:** 내 투표로 회장이 바뀌고 주요 사안의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됨으로써 회원들의 자부심 향상 및 가입률/납부율 동반 상승.

공약 4.2 종목 분회장 모두가 참여하는 평의회 구성

"분회 중심 소통 혁명, 84개 분회장 평의회 상설화"

분회장 중심의 정책 생산 기구 격상 및 거버넌스 대전환

1 필요성: "왜 84개 분회장 평의회인가?"

- **정책 결정의 편중성 해소:** 현재 일부 거대 종목 중심으로 편중된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84개 전 종목의 기술적 전문성이 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구조적 혁신이 필요함.
- **이슈 대응의 전문성 강화:** 각 종목(분회)에서 발생하는 세밀한 업역 분쟁과 기술적 현안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분회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본회와의 소통 창구가 단절되어 사장되고 있음.
- **조직의 정통성과 책임성:** 회의 근간인 분회와 분회장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의사결정 통로'가 전무함.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84개 전 종목 분회장이 참여하는 '분회장 평의회' 상설화

- **정책 생산 기구화** : 형식적인 자문 기구를 넘어 본회 및 각 분회의 의제 발굴·논의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 정책 생산 기구'**로 평의회 위상 정립
- **전원 참여 원칙:** 분회를 구성하여 등록한 모든 분회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 운영
- **상향식 의제 설정:** 각 분회에서 수렴된 현장 고충과 기술 현안을 평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 이사회는 평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심의·의결 하도록 구조 개선.

나. 분회장의 '본회 정회원' 가입 및 책임성 강화

- **정회원 의무화:** 회 거버넌스의 주역인 분회장이 회의 근간인 '정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조직의 일체감과 법적·윤리적 책임성 확보.
- **활동 지원:** 평의회 활동 시 해당 분회의 정책 연구비 지원 및 전문 행정 인력 매칭 지원.

다. 평의회 디지털 소통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논의 플랫폼:** 시공간 제약 없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회장 전용 디지털 평의회 시스템' 구축.

- **회의 내용 공개:** 평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과 결정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실시간 공개.

라. 소요재원

- 분기별 대면 평의회 개최 및 상설 소통 플랫폼 유지비 (연간 약 8,000만 원 예상).
-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되는 연간 11억 원 이상의 신규 수익 중 일부를 '분회 정책 개발 지원금'으로 할당하여 충당.

3 기대효과

- **전 종목의 균형 발전:** 특정 분야의 독점을 막고 소수 직렬 기술사의 목소리까지 협회 정책의 주류로 편입시켜 조직의 대통합 달성.
-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파워 극대화:** 모든 종목 분회장의 총의를 모은 정책은 국회 및 정부 협상 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정통성과 전문적 무게감을 확보함.
- **회원 참여 및 가입률 상승:** 내가 속한 분회의 의견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과정을 실시간 지켜보며 회원들이 '협회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로 이어짐.

공약 4.3 일하는 리더십, 30인 책임 부회장제

"일하는 리더십, 30인 책임 부회장제"

분야별·부처별 전담 리더십으로 회원의 권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 필요성: "왜 30인 책임 부회장제인가?"

- **형식적 임원진 탈피:** 명예직 위주의 부회장단을 분야별 전문성, 실무 권한을 가진 30인의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여 정책 집행 속도 제고.
- **지역·종목 소외 해결:** 지방 지회장과 주요 분회 대표를 부회장단에 전격 배치하여 거버넌스의 균형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
- **전방위 대정부 대응:** 기술사 권익과 직결된 13개 부처별 전담 부회장을 두어 밀착형 정책 대응 및 입법 로비력 극대화.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분야별·지역별·기능별 '30인 책임 부회장단' 구성

- **회 운영 업무별(6명):** 정책, 홍보, 사업재정, 안전, 여성, 교육전략 등 핵심 회무 전담.
- **지역 지회 당연직(5명):**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전북전주 지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지역 자치권 보장.
- **분회 대표(8명):**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주요 종목군 대표자를 통한 전문성 확보.
- **기타 특수 과제(5명):** 회원 민원 해결, 국제교류, 대관(국회) 협력 등 특정 목적 과제 수행.

나. 13개 정부 부처별 전담 체계 및 기술위원회 지원 가동:

- **부처 전담 부회장(5명):**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등 13개 유관 부처를 분담하여 제도 개선 활동 지원.
- **위원회 활성화:** 건축·토목·전기·기계·정보통신·조경·환경·안전·농축산 등 각 기술위원회 및 분회의 입법 활동을 본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다. 정관의 개정

- 당선 즉시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임시총회에 부의

라. 소요재원

- 운영 예산: 부회장단 활동 지원 및 실무 보좌를 위해 연간 약 1억 원 편성.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및 정부 위탁 사업 수주 확대를 통해 조달하며, 기존 회원의 회비 인상 없이 추진합니다.

3 기대효과: "전국 어디서나, 어떤 종목이라도 든든한 기술사회"

-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지회장과 분회장이 의사결정의 주역이 됨으로써,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입법 및 제도 개선 성과 극대화:** 13개 부처별 밀착 대응을 통해 기술사 활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는 곧 회원의 실질적인 일거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 **조직의 대통합을 통한 시너지:** 지역과 본회의 조직적 결합은 지역기술사회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결과 전체 기술사회의 위상 강화로 연결됩니다.

공약 4.4 100인 이사회로 확대

"참여의 폭을 넓히는 민주적 의사결정, 100인 이사회 시대"

84개 전 종목과 지역을 아우르는 수평적 거버넌스 확립

1 필요성

- **의결의 다양성 확보:** 현재 50명 수준의 이사회는 84개 전문 종목과 전국 지회의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특정 거대 종목에 의사결정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
- **대의성 강화:** 모든 기술사가 협회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각 분회와 지회의 대표자들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어야 함.
- **카르텔 타파:** 소수 특정 인맥 중심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고,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투명한 의결 구조가 필요함.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이사회 정수 100명으로 확대

- **선출직 이사 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한 분회에는 해당 종목의 전문성을 대변할 수 있는 '선출직 이사'를 의무 배정.
- **지회 추천 이사 위촉:** 전국 지회에서 추천하는 지역 기술사 리더들을 이사로 대거 위촉하여 중앙 중심의 회무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
- **여성 및 청년 쿼터:** 미래 기술사회의 주역인 여성 및 40대 이하 청년 기술사 이사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

나. 디지털 이사회 병행

- 100인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회의 시스템을 상설화하고, 전자 의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다. 소요재원

- 운영비: 이사회 개최 및 관련 행정 비용 증가분 (연간 약 5,000만 원 예상).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교육 수익금 중 '거버넌스 혁신 기금'을 설정하여 충당 (회원들의 부담 없음).

3 기대효과

- **의사결정의 정통성 확보:** 84개 전 종목과 전국 지역 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내린 결정은 6만 기술사 전체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됨.
- **소외 종목 없는 균형 발전:** 소수 직렬의 기술사들도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업역 문제를 의제화함으로써, 특정 종목의 독식을 막고 상생 발전의 기틀 마련.
- **민주적 회 운영의 모델 정립:**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지도체제를 완성하여 대외적으로 한국기술사회의 민주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정부 협상 시 압도적인 조직력을 과시함.

공약 4.5 본회와 지회간 협력체계 구축

"지회가 살아야 본회가 삽니다, 본회·지회 상생 협력체계 구축"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국적 기술사 네트워크 완성

1 필요성

- **지회의 법적 지위 불안정:** 현재 지회 연합회 등이 정관상 공식 기구가 아닌 임의 단체 성격이 강해, 정책 결정 및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열악한 지역 재정:** 본회 중심의 예산 구조로 인해 각 지역 지회의 독자적인 사업 수행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정보의 비대칭성:** 본회와 지회 간의 회원 명단 및 활동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단위의 신규 회원 포섭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지회 연합회의 정관 조직화

- 지회 연합회를 정관상 공식 조직으로 편입하여 의사결정권과 행정적 권위를 부여함.

나. 지회 지원금 파격 확대

-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지회 활성화 기금'으로 전용하여 각 지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대폭 증액함.

다. 본회와 지회의 교류 정례화 및 회원 명단 공유

- **교류 정례화:** 본회 회장단과 지회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를 연 2회(상·하반기) 정례화하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김.
- **회원 DB 공유:** 본회가 관리하는 기술사 회원 명단 및 입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 제공.

다. 소요재원

- **지원금 및 시스템 구축:** 지회 운영 지원금 확대 및 DB 연동 시스템 개발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및 각종 사업확대 수입으로 충당

3 기대효과

- **전국적 조직 응집력 강화:** 본회와 지회가 정관과 예산으로 단단히 묶임으로써 전국 6만 기술사가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원팀 기술사회' 달성.
- **지역 기술사의 권익 향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본회 정책이 지역 현장까지 빠르게 전파되어 실행력이 2배로 강화됨.
- **신규 회원 유입 가속화:** 실시간 명단 공유와 지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비회원 기술사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협회의 외연 확장 기여.

공약 4.6 대의원 제도 활성화

"기술사회의 버팀목, 대의원 권한 강화 및 활동 활성화"

대의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회 운영 핵심 파트너로 격상

1 필요성

-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 선출 및 주요 사업 심의·의결권을 가진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어 대의원 위상 정립이 시급함.
- **소통과 화합의 장 부재:** 대의원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협회 전체의 결집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전문성 활용의 한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의원들이 협회 정책 생산이나 대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임.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대의원 대회 정례화 및 소통 콘서트 개최

회 운영 보고를 겸한 '대의원 전진 대회' 및 '소통 콘서트'를 개최하여 투명한 회무 공유와 화합의 장 마련.

나. 평가위원 등 추천 시 대의원 우선권 부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평가위원 추천 요청 시 전문성을 갖춘 대의원 그룹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활동 기회 확대.

다. 정책 제안 활성화 및 포상제 도입

대의원 정책 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채택된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명예의 전당 헌액 등 인센티브 제공.

라. 기존 혜택 승계 및 예우 강화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도 기존 대의원들이 누리던 모든 혜택과 예우를 철저히 승계하고, 본회 각종 행사 시 의전 격상.

마. 소요재원

- **행사 및 포상비:** 대의원 대회 개최 및 정책 포상금 (연간 약 6,000만 원 예상).
- **재원 조달:**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 및 협회 수익사업 이익금으로 충당.

3 기대효과

- **대의원의 자긍심 및 책임감 고취:**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예우 강화를 통해 대의원들이 '기술사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함.
- **협회 정책의 전문성 제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활성화되어 실효성 높은 업역 수호 및 발전 방안이 도출됨.
- **조직적 결속력 강화:** 대의원 대회를 통한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계파와 종목을 초월한 대통합의 기틀 마련.

공약 4.7 한림원 활성화 지원

연륜의 지혜를 기술사회의 자산으로, "한림원 활성화 지원"

원로 기술사의 경험 전수와 품격 있는 기술문화 조성

1 필요성

- **경험 자산의 축적:** 연륜 있는 원로 기술사들의 방대한 경험과 지혜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협회의 핵심 역량으로 자산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세대 간 전수:** 원로들의 노하우를 후배 기술사들에게 전수하여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술사회 내부의 존중과 화합의 문화를 구축해야 함.
- **전문가 단체의 사회적 권위 확보:**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예술 등 폭넓은 소양을 갖춘 기술사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품격과 권위를 높여야 함.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지혜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및 협력 체계 구축

- **안전 데이터 아카이브:** 원로 기술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 관련 자료 축적 및 한림원 주도의 독자적 R&D 체계 마련.
- **기술사업화 협력:** 한림원의 전문 지식을 본회의 각종 사업과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협력 모델' 가동.

나. 품격 있는 기술문화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전시회:** 문학, 미술, 서예 등 각종 작품 전시 및 정기 문화 행사를 본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 **협회 상징 강화:**기술사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회가(會歌)' 제작 공모**전 실시 및 보급 지원

다. 소요재원

- **활동 지원 및 공모비:** 한림원 행사 지원 및 회가 제작 상금 등 (연간 약 4,000만 원 예상).
- **재원 조달:** '전문가 문화 육성 기금'을 조성

3 기대효과

- **기술 자산의 영속성 확보:** 원로들의 소중한 경험이 안전 데이터와 R&D 성과로 남게 되어 협회의 기술적 권위와 국가적 기여도가 상승함.
- **신구 세대 통합의 기틀 마련:** 원로의 지혜와 젊은 기술사의 열정이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어 조직 내부의 결속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됨.
- **협회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회가 제작과 문화 활동을 통해 6만 기술사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품격 있는 전문가 단체로 이미지 제고.

공약 4.8 회원 민원처리 Help Desk 마련

"회원의 아픔이 회의 아픔입니다"

6만 회원의 주권을 지키는 '회원 민원 혁신 및 권익 수호 시스템'

1 필요성

- **응답의 지연:** 현재의 아날로그식 민원처리는 담당자 연결조차 힘들고, 답변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어 회원들의 불신이 큼.
- **전문성 부족:** 업역 분쟁이나 법적 고충에 대해 협회 사무국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법률·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소외된 목소리:** 지방지회나 소수 전문분회의 민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되고 있음.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AI 기술사 민원 비서 'K-PE Helper' 도입

- 84개 종목의 법령, 판례, 유사 민원 해결 사례를 학습한 AI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담 및 즉각적인 법규 검토 서비스 제공.
- 단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고난도 민원은 담당 전문가에게 실시간 매칭.

나. 100인 이사회 '민원 직소(直訴)' 제도화

- 84개 전 종목 분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여, 각 분회의 민원을 이사회 안건으로 직접 상정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유리벽 행정' 구현.
- 민원 해결 지표를 임원 및 사무국 평과에 반영하여 책임 행정 강화.

다. 입법 지원 'PE-SWAT' 팀 가동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민원을 분석하여 직접 법 개정(입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로비 전담팀' 운영.
- 회원 업역 분쟁 및 부당 대우 발생 시 협회 차원의 무료 법률 지원 및 강력한 대정부 항의 방문 전개.

라. 소요재원

- **AI 시스템 구축:** 제4공약 (AI 스마트 기술사회)의 'AI 데이터 허브' 예산에 포함하여 중복 투자

방지.

- **운영 비용:**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로 확보된 연간 약 11억 원 이상의 추가 가용 재원 중 15%를 민원 및 법률 지원 기금으로 우선 배정.

3 기대효과

- **체감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 시간 80% 단축 및 전문적인 법률 가이드를 통해 "기술사회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심어줌.
- **회원 가입률 증대:** 실질적 권익 보호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비회원 기술사들의 자발적 협회 가입 유도 (가입률 70% 달성 견인).
- **협회 위상 격상:** 개별 회원의 고충을 데이터화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가 이익 대변 기구'로서의 정치적 파워 극대화.

공약 4.9 회와 회원간 소통 강화

"유리벽 행정과 디지털 소통으로 하나 되는 기술사회"

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회원 소통 대전환

1 필요성

- **정보의 독점과 불신:** 협회의 주요 결정이 소수 임원진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회 운영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이 심화됨.
- **참여 기회의 부재:** 기술사 제도 발전 등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이 의견을 낼 통로가 부족하여 회와 회원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발생함.
- **디지털 소통의 부재:** AI 시대를 선도해야 할 전문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식 공지 체계에 머물러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함.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공약 실행 과정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 후보가 내건 모든 공약의 이행 단계를 수치로 시각화하여 공개.
- 정기적인 '회원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즉시 반영.

나. 기술사 현안 '유튜브 생중계' 및 공론화

- 기술사 제도 발전, 업역 수호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기술사 끝장 토론'을 개최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
- 주요 정책 결정 전 온라인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6만 회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 의무화.

다. 회의 운영의 '유리벽 선언' (주요 회의 공개)

- 이사회, 대의원총회, 평의회 등 협회의 명운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의 논의 과정 및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보안 사항 제외).
- 회의록 전문을 디지털화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 열람할 수 있는 'KPEA 아카이브' 구축.

라. 소요재원

- 시스템 구축비:기존 협회 홈페이지/앱 고도화 비용(약 5,000만 원 예상).

- 운영비: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연간 약 3,000만 원, 신입 교육 수익금 활용).

3 기대효과

- 신뢰 회복:회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6만 기술사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
- 회원 참여 폭발:실시간 소통 채널 가동을 통해 회원들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이는 협회비 납부율 및 가입률 상승으로 직결.
- 강력한 정통성: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어 대국민 및 대정부 설득력 강화.

공약 4.10 엔지니어링 AI연구소 설립

디지털 전환의 선도자, "엔지니어링 AI 연구소 설립"

AI 시대, 기술사가 엔지니어링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엔지니어링 AI 연구소인가?"

- **AI 시대의 기술 주도권 확보:** 인공지능이 엔지니어링 실무에 도입됨에 따라, 기술사가 AI 결과물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 연구가 절실합니다.
- **데이터의 자산화 및 표준화:** 84개 종목에 산재 된 방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AI 학습용으로 표준화하여 기술사회의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 **제도적 대응력 강화:** AI 활용에 따른 업종 간 충돌, 윤리적·안전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기술사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도 정비를 주도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엔지니어링 AI 데이터 허브 구축:

- 84개 전 종목의 설계 도서, 사고 사례, 기술 표준 등 전문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나. AI 검증 기준 및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분야별 AI 활용 지침을 수립하고, AI 생성 답변의 오류 판단 기준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사의 검증 권한**을 뒷받침합니다.

다. AI 기반 엔지니어링 생태계 보호 및 법제화:

- 특정 분야 도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엔지니어링 AI 윤리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선도합니다.

라. 소요재원

-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연간 약 2억 원 (초기 인프라 구축 포함).
- 재원 조달:정부의 AI 진흥 및 R&D 예산 과제 수주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연구 인력 인건비로 일부 활용합니다.

3 기대효과: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사회"

- **엔지니어링의 표준 및 방향성 제시:** AI 시대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기술사의 위상을 격상시킵니다.
- **법제도 정비 주도로 권익 보호:** AI 관련 입법 과정을 주도하여 기술사의 전문적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 업역을 확보합니다.
-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계 구축:** 기술사의 고도화된 지식을 디지털 자산화하여 후배 세대에게 전수하고, 협회의 새로운 수익 모델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공약 4.11 종목별 맞춤형 AI서비스 보급

실질적 도구의 혁신, "종목별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 보급"

"AI Technical Staff"
- AI는 기술사를 돕고, 최종 결정은 기술사가 내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종목별 특화 AI인가?"

- **범용 AI의 한계 극복:** 현재 ChatGPT, Claude 등 범용 AI는 엔지니어링의 고도화된 전문 데이터가 부족하여 실무 적용 시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술 전문성의 디지털 구현:** 84개 전 종목의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기술사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전문 AI 비서'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회 가입 가치 증대:** 오직 한국기술사회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독점적 AI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의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엔지니어링 특화 AI 모델 개발

- GPT-OSS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84개 전 종목별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최적화된 '회원 전용 AI 비서'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나. 실무 전 단계 AI 지원 체계 구축:

- 설계: 계획수립 시 관련 설계 자료와 프레임을 자동 생성·제공합니다.
- 감리: 최신 법규와 양식을 반영한 감리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시공: 시방서와 도면 간의 정합성을 AI가 실시간으로 자동 검토합니다.
- 현장 판단: 현장 사진 업로드 시 잠재적 위험 요소를 1차 스크리닝하여 기술사의 최종 판단을 보조합니다.

다. 소요재원

- 개발 및 서버 비용:초기 약 3억 원.
- 재원 조달: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수익금을 매칭 펀드로 활용합니다.

3 기대효과: "효율은 높게, 판단은 정확하게"

-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단순 반복적인 서류 작업과 데이터 검토를 AI가 수행함으로써 기술사는 고부가가치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 반영된 정확한 의사결정:** 엔지니어링 전문 데이터 기반의 AI 지원을 통해 업무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술적 공신력을 높입니다.
- **회의 플랫폼 파워 강화:** '기술사 전용 AI'라는 강력한 회원 혜택을 통해 비회원 기술사의 가입을 촉진하고 조직력을 강화합니다.

공약 4.12. 기술사 전용 AI 스마트오피스 환경 제공

"기술사 전용 AI 스마트 오피스 환경 제공"

"1인 기술사도 대형 기업처럼" - 최신 스마트 인프라와 AI 서비스를 공유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전용 스마트 오피스인가?"

- **높은 인프라 도입 비용:** 고가의 스마트 협업 도구와 최신 AI 서비스는 1인 및 소규모 기술사사무소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어 기술 혁신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양극화 심화:**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소규모 사무소 간의 디지털 환경 격차로 인해 수주 경쟁력 및 업무 효율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전적 AI 역량 강화 필요:**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실제 현장 업무에 AI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스마트 오피스 인프라 통합 구축 및 AI 서비스 연계:

- 기술사회 주도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Google Workspace, MS Teams, Slack 등)와 AI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공동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회 및 분회 간 협업을 지원합니다.

나. 바로 쓸 수 있는 AI 실전 교육 패키지 운영:

- 현장 업무 중심의 AI 활용법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 과정을 CPD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전 회원의 디지털 역량을 상향 평준화합니다.
- 종목별 맞춤형 AI 활용 실전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가동합니다.

다. 소요재원

- 플랫폼 구축 및 교육 운영: 연간 약 1억 5,000만 원.
- 재원 조달: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체 할인 혜택을 확보하고, 초기 운영비는 '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합니다.

3 기대효과: "규모의 한계를 넘는 무한 경쟁력"

- **초기 투자비 제로화:** 개인 기술사가 고가의 최신 AI 인프라를 별도의 투자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창업과 운영이 용이해집니다.
- **사무소 규모와 무관한 동등한 경쟁력:** 대형 기업과 대등한 디지털 작업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사의 전문성 자체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혁신:** 인프라 제공과 교육이 결합된 패키지를 통해 전 회원이 AI 시대에 즉각 대응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납니다.

공약 4.13 기술사 생성형 AI 활용 경진 대회 개최

집단지성의 혁신 축제, "기술사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개최"

"기술사의 노하우가 AI의 지능이 된다"
- 엔지니어링 AI 실무 모델을 전 종목으로 확산하겠습니다.

1 필요성: "왜 생성형 AI 경진대회인가?"

- **국가 AX(AI 전환) 전략과의 정렬:** 과기정통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AI 전환 기조에 맞춰, 기술사회가 엔지니어링 분야의 AI 혁신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 **실무형 AI 'AI Co-Scientist' 구현:** 범용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사의 전문 지식을 결합한 '전문가형 AI 스태프' 모델을 발굴하여 84개 전 종목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노하우의 자산화 및 세대 통합:** 개별 기술사가 보유한 AI 활용 팁을 회의 공식 데이터 허브로 결집하고, 젊은 기술사의 패기와 원로의 경륜이 'AI'라는 도구로 소통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2 이행방안 및 소요재원

가. 대회 개요 및 표준 운영 체계 구축

- 대회명:제1회 기술사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AI Technical Staff Contest).
- 주제 및 목적: 엔지니어링 실무(설계, 감리, 시공, 안전 등)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전 회원 공유.
- 진행 프로세스: 1단계 예선(아이디어 제안서 심사) → 2단계 본선(발표 및 실시간 시연) → 3단계 최종 시상 및 결과물 템플릿화 배포.

나. 기술 지원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 가동

- **인프라 지원:** 정부의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참가자들에게 고성능 GPU 및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 멘토링:** '엔지니어링 AI 연구소(4-1.공약)' 연구진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MS, 구글 등) 기술 전문가를 심사위원 및 멘토로 초빙하여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다.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총 예산:약 8,000만 원 (행사 대관, 시상금, 플랫폼 운영비 포함).
- 재원 조달:'신입 기술사 가입률 70% 달성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 수입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과기부의 'AI 경진대회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여 회원 부담 없이 추진합니다.

3 기대효과: "혁신을 넘어, 기술 주권의 확립"

- **엔지니어링 AI 표준 모델 선점:**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프롬프트와 업무 자동화 프레임은 즉시 'AI Technical Staff'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반영되어 전 종목 기술사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됩니다.
- **협회의 디지털 리더십 공고화:** 기술사가 AI에 대체되는 대상이 아니라 AI를 검증하고 부리는 '최종 결정권자'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여 협회의 위상을 격상시킵니다.
- **회원 참여와 결속력 강화:** '무료 참가 및 상금 혜택'과 더불어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축제의 형식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회원 가입 가치를 제고합니다.

기호3번 남우기 후보 공약집